

창원 의회 소식

제8호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진해구 웅동1동 대장동계곡』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CONTENTS



04 의장 인터뷰

06 통합 창원시의회 개원 3주년을 돌아보며

14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27회 임시회(2013. 4. 11. ~ 4. 19.)
- 제28회 임시회(2013. 5. 10. ~ 5. 14.)
- 제29회 제1차정례회(2013. 6. 5. ~ 6. 28.)

24 예산심의 활동

26 행정사무감사

27 시정에 대한 질문

33 5분 자유발언

38 건의안 및 결의안

47 위원회 활동

5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54 언론 보도자료

67 의원 칼럼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 성과와 남은 1년간의 다짐을 배종천 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개원 3주년, 그 동안의 성과는?

우리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전국기초자치단체중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의장단을 중심으로 지역간 갈등상황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통해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620여건 등 8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의정연찬회와 국회위탁연수를 시행하여 생산적인 의정역량을 다졌으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대외 우호협력 증진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55명의 시의원 모두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비전을 가진 창원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간 역점적으로 다룰 현안은?

지난 3년간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집중했으며 시청사 소재지 결정 등 어려운 난제들도 많았습니다. 남은 1년간은 그 과정에서 빚어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110만 창원시민과 한 배를 탔습니다.

화합과 상생을 통해 창원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현장의 중심에 우리시의회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성과와 활동계획은?

경남지역의 발전방향 협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시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의 간담회 및 기자회견,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남시군의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보다 큰 도약을 위한 과정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55명의 시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통합 창원시의회 개원 3주년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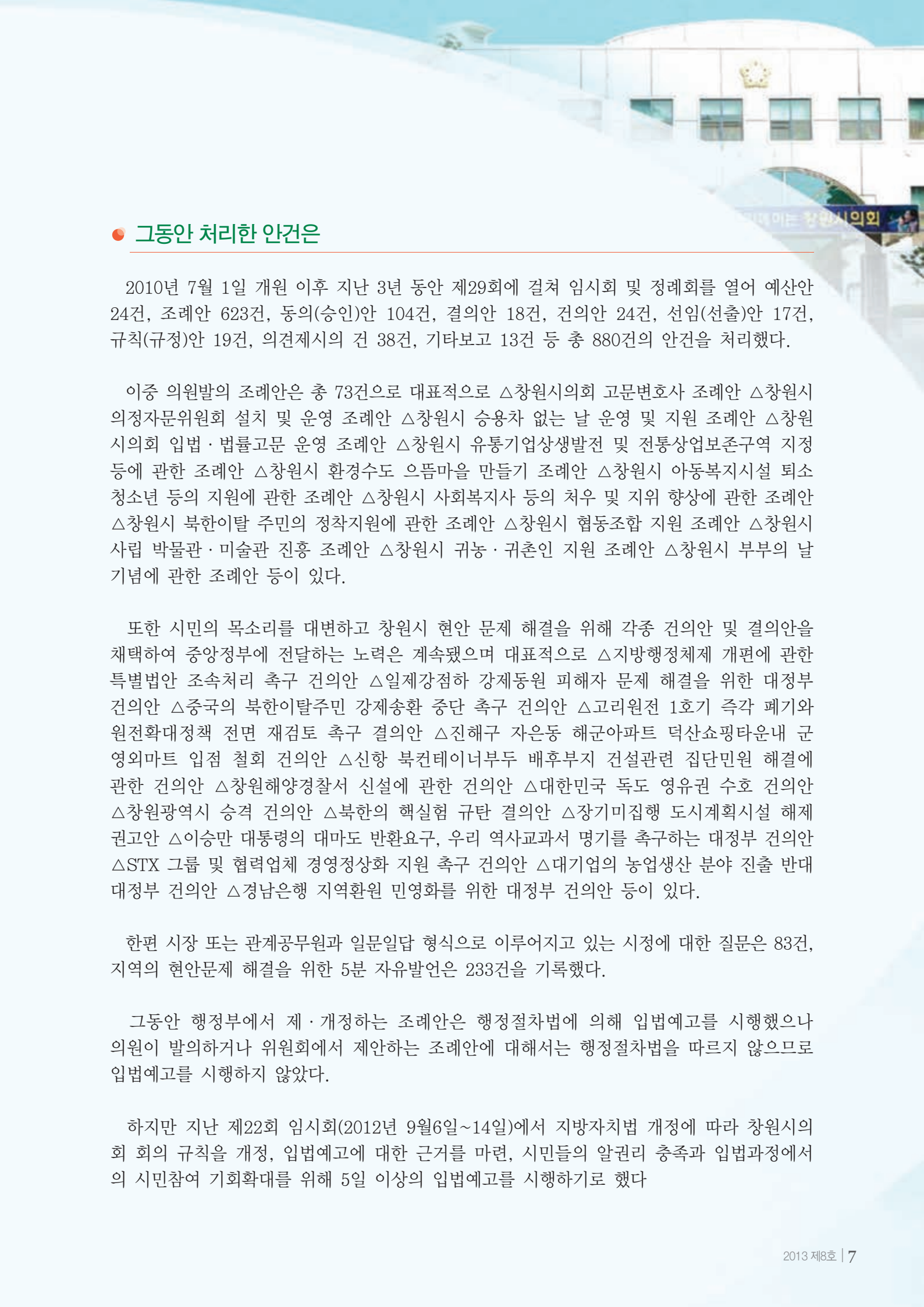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힘차게 출범한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전반기 의장 김이수, 후반기 의장 배종천)가 지난 7월 1일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통합 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및 야구장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겪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창원시가 화합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창원시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기까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된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의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 이후 매듭을 짓지 못함에 따라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창원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24일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 28일까지 제7차에 걸친 회의결과 ①통준위 결정사항 전면 무효화 ②상임위에서 부결된 청사소재지 조례안(3건) 본회의 상정 부결 ③통합시 명칭, 소재지 등 새로운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는 협의사항을 도출하게 됐다.

이어 지난 3월 5일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1일까지 제7차에 걸친 회의결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4월 23일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고와도 같은 진통 끝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각각 가결됐다.



●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2010년 7월 1일 개원 이후 지난 3년 동안 제29회에 걸쳐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 24건, 조례안 623건, 동의(승인)안 104건, 결의안 18건, 건의안 24건, 선임(선출)안 17건, 규칙(규정)안 19건, 의견제시의 건 38건, 기타보고 13건 등 총 8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3건으로 대표적으로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창원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은 계속됐으며 대표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건의안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내 군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에 관한 건의안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건의안 △창원광역시 승격 건의안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 우리 역사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이 있다.

한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은 83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은 233건을 기록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입법예고를 시행했으나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입법예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제22회 임시회(2012년 9월6일~14일)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예 따라 창원시의 회 회의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전의원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 개개인이 각종 정책토론회, 학술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창원시의 발전 방안 모색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매년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의정연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를 초청하여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 의정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지를 선정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해 세계화 시대에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비교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한 선진 제도와 시책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이 자율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시설연구회, 좋은조례연구회, 도시계획연구회, 복지시책개선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를 등록하여 32명의 의원이 간담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현장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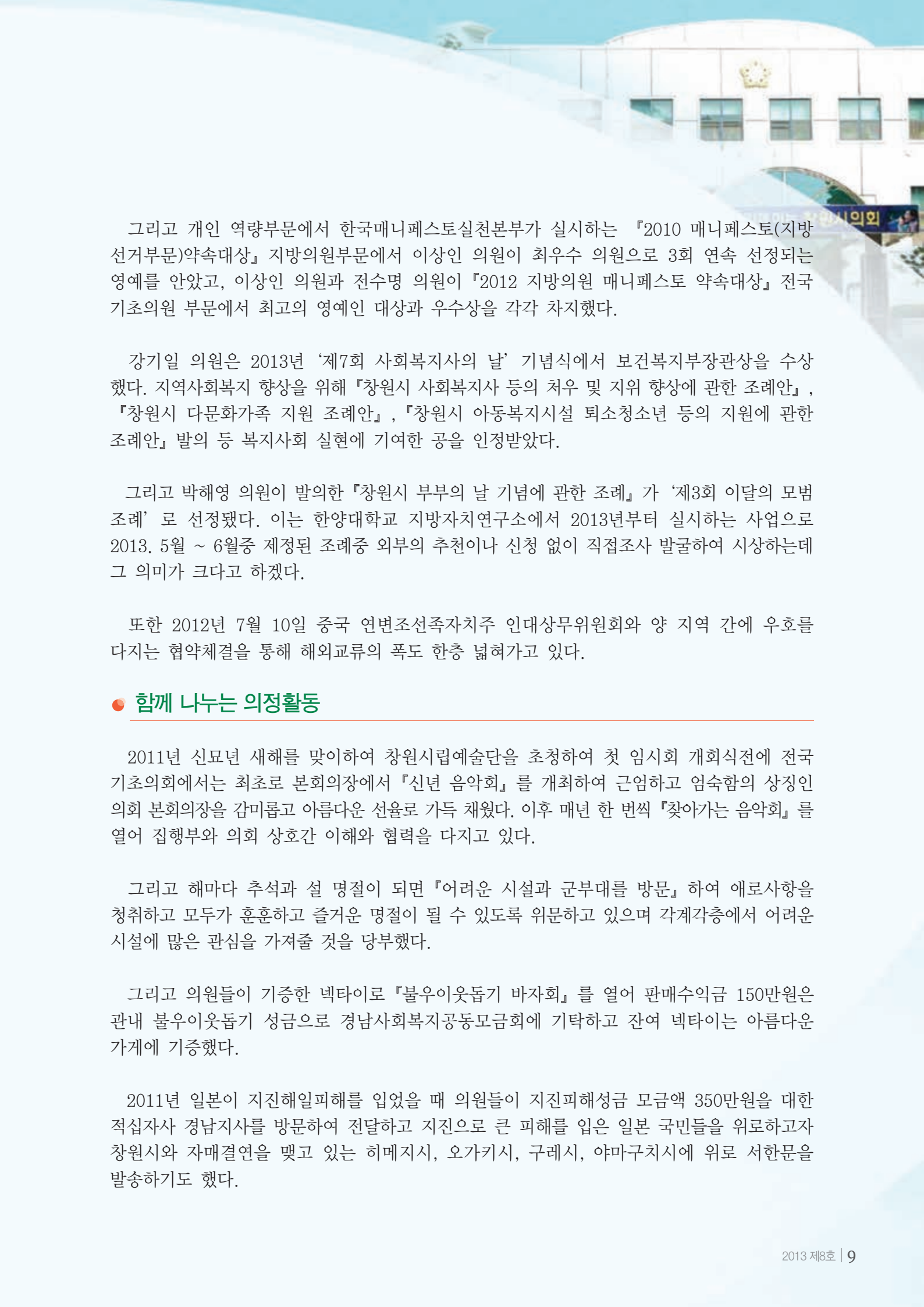
그 중 시정 전반에 걸친 조례 연구로 6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로 진해구청 내에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가 개설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경남대학교와의 학술세미나 개최로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제도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전주시의회와 2회에 걸친 공동세미나 개최로 지방의회 상호간의 우수사례 공유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회운영, 조례 제·개정 및 각종 법률사항 등 70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의회운영에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 대외 위상 제고

한국 지방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관한 제9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강장순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제정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기초지방의회로는 단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개인 역량부문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하는 『2010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지방의원부문에서 이상인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3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상인 의원과 전수명 의원이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 기초의원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강기일 의원은 2013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박해영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3회 이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됐다. 이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 5월 ~ 6월중 제정된 조례중 외부의 추천이나 신청 없이 직접조사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2012년 7월 10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와 양 지역 간에 우호를 다지는 협약체결을 통해 해외교류의 폭도 한층 넓혀가고 있다.

●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창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첫 임시회 개회식전에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본회의장에서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근엄하고 엄숙함의 상징인 의회 본회의장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후 매년 한 번씩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추석과 설 명절이 되면 『어려운 시설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기증한 넥타이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판매수익금 150만원은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잔여 넥타이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2011년 일본이 지진해일피해를 입었을 때 의원들이 지진피해성금 모금액 350만원을 대한 적십자사 경남지사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창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히메지시, 오가키시, 구레시, 야마구치시에 위로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 통합 창원시의 권익과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

2010년 7월 27일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율통합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인구 108만명의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정부는 창원시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홀대를 하여 창원시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하고,

2011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율통합 약속 이행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약속 이행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여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과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여 열린 결의 대회였다.

2011년 4월 6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과서 검정 승인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 표시한 교과서를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11월 26일 연평도 일대에 포사격을 감행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창원시의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전사한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창원시민과 함께 같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3년 2월 2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와 핵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왜곡된 역사 교육과 영토 주권 침해와 관련한 일체의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결의문은 국회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했다.

● 시민생활 속으로 파고든 의정활동

배종천 의원은 2013년 2월 7일 새벽시간에 성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현장 체험을 통한 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 및 내집앞 청소를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환경미화 체험의 날』 첫 번째 체험 참여자가 되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남상업지역의 민생현장 및 쓰레기 배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미화원 3명과 함께 한조가 되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일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어 2013년 6월 4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 창원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노인세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말벗도 되어 드렸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회기중 또는 현안사항 발생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 모색과 위로·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별 시민생활 속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 창원과학고를 방문하여 운영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 현장방문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처리를 위한 양촌권역활성화센터 부지매입현장 방문
- 2012년부터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된 소방관련 업무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소방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 설명 청취
- 시설관리공단 신규 수탁사업 현황 확인과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의창노인복지관과 진동종합복지관 방문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처리를 위한 진해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신축지 등 방문
- 새야구장추진사업단의 추진업무 현황청취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한 진해 야구장 신축부지 방문

〈균형발전위원회〉

- 제3차 부산신항 계획과 관련 부산감천항 목재부두 방문
- 오동동 문화광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
- 용호5구역 재건축사업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지 방문
- 가포신항 공사현장 등 9개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안사항 청취
- 수돗물 안전을 위해 칠수정수장 인근 폐주물사 매립현장 방문
- 진동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행업체 관계자 노고 격려
-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등 주요사업 현장 방문
- 창원소방본부와 마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요업무현황,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경제복지위원회〉

- 진동면 신기마을 가고파 수출영농조합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 청취
- 관내복지시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방문
- 진동 고현마을을 방문하여 어촌체험마을 체험활동
- 진해해양솔리파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 청취
- 진동하수관거정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 등을 청취
- 해양솔라파크 공사현장에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절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창원컨벤션센터, 해양솔라파크, 진해구 소재 잠도를 방문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

〈환경문화위원회〉

- 프로야구 신규 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타지역 야구장 시설 견학
- 창원사격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 NC다이노스 프로야구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 구. 진해화학부지를 방문하여 토양오염 정화시설 등을 둘러봄
-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마산야구장 등 관내 야구장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 창원시청 양궁선수단 격려 방문, 해양솔라파크 사업현장 방문 등

〈도시건설위원회〉

- 일반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 마산합성동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현장을 방문 불편사항 청취
- 국도25호선 대체우호도로 임시개통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민원불편사항과 안전물 설치 등을 확인
- 남천, 창원천, 광려천, 회원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장 현장방문
- 태풍 ‘산바’ 로 침수피해를 입은 진해구 용원동 원남·원북마을 현장방문으로 예방 대책에 대한 침수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격려
- 성산구 공단로에 위치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청취와 장례시설 등 주요시설 둘러봄
- 진해신항 및 해양솔라파크 등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또한 창원시가 전국 최초 자율통합시 물모델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3년동안 1,913명이 64회에 걸쳐 다양한 소속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이 방문하면 의회홍보 동영상을 방영하여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리고, 의회 회의진행 동영상을 방영하여 올바른 회의진행과 건전한 토의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모의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이해하는 현장 교육의 귀중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우리시의회의는

지난 3년간 우리시의회의는 지역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55명의 시의원 모두는 110만 창원시민이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데 온 힘을 모으겠다.

시민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창원시의회의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4. 15. ~ 4. 23.) - 9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

- 발 의 자 : 이성섭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진해구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일부)으로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에 이원화되어 있고, 주거단지 내용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해 2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법률의 적용으로 행정력 낭비와 사업 시행자의 사업 비용 부담 및 시행 기간 지연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주택용지 등 총 10,515.8천㎡ 중 녹산지구 배후주거단지(용원지구)인 1,672천㎡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별도의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산업단지로 존치하는 것은 11,591세대 30,914명의 시민들 에게만 고통을 부담하는 행위로 도시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 시설 변경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국가 산업단지에서 해제 해 줄 것을 촉구함.

■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 발 의 자 : 박철하·조재영·공창섭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일본 정부가 201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 일본 중앙정부 차관급이 참석, 지방 행사에서 정부 행사로 격상, 날로 독도 침탈의 야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 미온적인 행동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나. 이에 일본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그와 대응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국제적 사실과 이승만 대통령께서 3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당당히 명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대마도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 영토임을 각인시키고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함.

■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

- 발 의 자 : 공창섭 · 이희철 · 최미니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경상남도지사는 선거공약에 도민과 창원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도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는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 기관 이전 및 매각을 창원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상남도에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인재개발원, 보건환경 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공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소방훈련장 예정부지 등)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와 도유재산 매각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 제 안 자 : 균형발전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로 「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활 안전분야의 시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고,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

- 제 안 자 : 황일두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의 작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지 3여 년에 다다르고 있으나,

통합 이후 구. 창원지역으로의 행정적·경제적 편중이 심화되어 특히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구. 마산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통합의 주체인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통합 창원시의 발전 시너지로 순치(馴致)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의 의제 마저 사문화(死文化)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원상회복)키로 하였음.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4. 15. ~ 4. 23.) - 9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김동수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통합시청 소재지를 통합이후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나 지역 유치 기대로 인한 갈등으로 통합시청 소재지가 결정 되지 않고 있어.
나. 2013년 3월 25일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특별위원회 전위원이 합의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청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봉림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5. 10. ~ 5. 14.) - 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박해영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에서 발원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창원시는 지난 5월 1일부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선거를 도운 박상재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이사장 재선임을 둘러싸고 추천후보 결정에 많은 잡음과 비전문가 추천, 정치적 특혜 논란 인사 등으로 7개월간 장기간 이사장 선임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창원시의회는 특혜, 보은, 부당한 인사로 간주하여 이사장 스스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자 함.

▣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의 일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총리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함.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5. 10. ~ 5. 14.) - 5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노창섭 · 김태웅 · 김석규 · 이성섭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재계 13위 그룹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창원시에 본사를 둔 STX그룹 4개의 계열사가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2,500여개 업체 11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한 40여만 명이 거리에 내몰리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고용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 부서 등 관련기관에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함.

▣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해양공원에 창원솔라타워, 전시장 및 국제회의실 등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전 ·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를 시행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안전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하고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이용 확산을 위하여 권고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963호 2012.7.19.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2013. 6. 5. ~ 6. 2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 발 의 자 : 차형보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지역 농가와 전체 농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 부처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함.

▣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경남은행은 1970년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향토은행으로 역할을 해오던 중, 1998년 외환 위기로 2000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완전 감자 명령에 이어 공적자금 3,528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바 있음.

나. 지난 2010년 7월 정부의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 방침 발표 이후, 2010년 우리사랑 컨소시엄의 우리 금융지주회사 전체매입 추진 포기과 2011년과 2012년에도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민영화에 연속 실패하면서, 금년 6월 말 우리금융지주회사 분리 매각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다. 이에 인근의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인수 참여의사를 밝혀 만약, 타 지역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 고용창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여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적 배려를 건의하는 것임.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 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동 채권 발행이 지방재정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 등 공익사업 자금 조달·공급 등 이 목적이거나 최근 낮은 은행 대출이자율 등은 동 기금의 공익사업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동 기금 용자 이자율 인하도 필요한 상황임.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용자이자율 인하를 도모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13. 2. 22)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에서 '기능직 운전원' 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에 의하여 행정각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관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기업대표에게 우리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2013. 6. 5. ~ 6. 2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2012. 10.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철도부지내 장옥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공설시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기 위함.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통합 전 3개시의 상이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대상, 지원금 산정 등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본 구역은 2007년 6월 28일 석전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추진 중에 우리시에서 『2020 창원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2012.11.07) 용적을 완화규정(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 부지제공,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에 건축계획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개요

- 일 시 : 2013. 6. 5.(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11명
- 안 건 명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위원명단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이명근	박순애	차형보, 김이수, 김성준, 조재영, 김윤희, 박삼동, 이해련, 이치우, 이옥선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2013. 6. 5.)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2013. 6. 27.)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결과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납 비율 (%)	미 수 납 액		
				소 계	결손처분	이 월
계	2,923,716,191,305	2,812,860,819,721	96.2	110,855,371,584	18,663,300,933	92,192,070,651
일반회계	2,151,564,852,126	2,097,589,553,230	97.5	53,975,298,896	13,239,920,023	40,735,378,873
특별회계	772,151,339,179	715,271,266,491	92.6	56,880,072,688	5,423,380,910	51,456,691,778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2012년 합계	2,818,308,887,340	2,485,643,171,702	2,353,235,659,724	283,270,672,455	181,802,555,161
일반회계	2012년	2,123,866,252,342	1,968,822,899,535	1,872,656,256,110	61,991,688,242
	2011년	2,124,763,811,075	1,946,100,762,772	1,819,396,262,722	231,413,128,342
	증 감	△ 897,558,733	22,722,136,763	53,259,993,388	△ 42,194,820,352
특별회계	2012년	694,442,634,998	516,20,272,167	480,579,403,614	94,052,364,465
	2011년	672,313,076,740	513,149,096,879	479,118,053,715	75,234,709,998
	증 감	22,129,558,258	3,671,175,288	1,461,349,899	18,817,654,467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10	4,073,099,000	3,686,891,560	2,428,259,150	1,258,632,410	386,207,440
일반회계	9	3,305,366,000	2,919,158,580	1,660,523,170	1,256,632,410	386,207,420
특별회계	1	767,733,000	767,732,980	767,732,980	0	20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금규모

(단위 : 원)

기 금 수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전년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저 소득 자 녀 장 학 기금 등 13개 기금	106,657,731,259	4,536,380,235	96,883,234,845	92,346,854,610	106,657,731,25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 요

- 감 사 반 :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 감사범위 : 2012. 5. 1. ~ 2013. 4. 30.
- 감사기간
 - 의회운영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균형발전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경제복지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환경문화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도시건설위원회 : 2013. 6. 10. ~ 6. 18.(9일간)
- 대상기관 : 담당관, 실, 국, 사업소, 센터, 보건소, 구청,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새야구장건설사업단
- 지적사항 집계표

위 원 회 명	계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386	378	4	4
의회운영위원회	4		4	
기획발전위원회	106	103		3
균형발전위원회	77	77		
경제복지위원회	80	80		
환경문화위원회	49	48		1
도시건설위원회	70	70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환경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산회원구 양덕1.2동, 산호동 일대의 갈따구떼 창궐에 대한 대책 등

질문 현재 방역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 더워지면 더 많은 갈따구떼가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은?

답변 금번 양덕·산호동 일대에 발생한 갈따구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함.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충을 구제하여 갈따구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인규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질문 매년 갈따구떼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심각할 정도로 창궐하고 있다면 복개천 하부에 특단의 관리 없이는 상류생태하천조성은 무의미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관리계획은?

답변 복개천내에 침전·잔류·오니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함. 근본적인 목표는 하천 및 마산만 오염을 방지하고 해충서식이 되지 않도록 방제와 박멸에 지혜를 모으겠음.

질문 양덕2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이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지난번 구 마산시에서 시행했던 BTL사업에 빠져있음. 생태하천을 조성해 놓는데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음. 앞으로 계획은?

답변 BTL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약 1만 세대 정도가 체척된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사업으로 70% 지원받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 하수유입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동예술촌 활성화 방안 및 도생재생사업 관련, 구청 포괄사업비 배분 등 재정운영 방안 관련

질문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재단, 창동예술촌이 각각 활동하고 있음. 그 사업들과 목적에 대해 우리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답변 도시지원센터는 창동·오동동 상가지구와 노산동 주거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기법을 접목하는 도시재생지구임. 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6개 시장의 경영개선사업을, 창동예술촌은 50여개의 빈 점포에 50명의 예술인을 입촌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 창동예술촌이 올 10월에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됨. 여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시에서 진단했던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 창동예술촌의 규모를 확대 시키려고 함. 예술촌을 한 20곳 정도 늘리고, 문화예술 전문가를 배치해 전체 예술인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종합안내소, 소규모 공연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질문 구청으로의 업무이관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력조정과 자체 예산문제에 대한 지원은?

답변 구청기능 강화로 많은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 및 예산도 함께 지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 다음 예산편성 시에서는 구청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음.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 해 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명서1동 관내 주민운동장, 국도14호선, 도계외곽도로
개설 관련, 용강고개 주유소 인허가 추진사항

질문 당초에 명지여고 옆에 주유운동장을 계획했었는데 명지여고 담벼락과 너무 인접해 주민들이 원치 않음. 그래서 가상적으로 한 1만평~1만 5천평 정도로 체육공원 추진을 수차례 부탁했는데 계획은?

답변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1년 6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현재 15필지 중 2필지는 보상완료, 나머지 부분 보상비와 시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질문 국도14호선 공사로 파헤쳐진 토사가 밑에 800mm 관을 통해 하남천으로 흘러 가야 되는데 수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답변 별개 제근 관계로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가 되어 비가 오면 유출현상이 일어나는 것임.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수기 이전까지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옆에 일부 석축 붕괴 부분이 있는데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음.

질문 유류 5만 리터를 보관하기 위해 16개의 탱크가 들어가고 세차기도 들어감. 이 시설 바로 밑에 음용수를 전부 지하수로 대체하는 마을이 있음. 20미터가 넘는 벽돌을 쌓고 절개지에 이런 공사를 해 놓았음. 이 정도면 웅벽치고 어스 앵커 하나 박아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 이미 허가가 나고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공사를 단단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하겠음.

이 희 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NC소프트 관련, 도청 주변 고도제한 해제 관련

질문 NC가 창원시민들을 위해 어떤 지역공헌사업을 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협약서상 2군 훈련캠프시설 건립 의무자가 NC인지 우리 창원시인지?

답변 누비자 432대의 3억원 상당과 올 3월 주니어 다이노스 스프링 챔피언십 5천만원 정도의 장비지원,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적이기 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통해 공헌했다고 보면 됨. 우리 시와 무관하게 고성군과 제2군 훈련 캠프조성 MOU체결 및 2군 훈련캠프 조성사업비 250억도 전액 NC에 있음.

질문 시가 야구장 건립비 1,280억 등 최소한 1,454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NC가 새야구장 25년 장기 임대계약 혜택을 받게 된다면 NC가 새야구장 건립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답변 새로 짓게 되는 진해 새야구장은 NC의 것이 아닌 우리 110만 창원시민에 위한 공공시설로서 NC의 야구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 도청 주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도시경관이 훼손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답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나 여론도 없는 지역으로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우려, 도시과밀화 현상 등으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고도를 풀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임.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위원회)도시가스공급 관련, 전통시장 및 합성동 상권 활성화,
경상남도 제2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질문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사업이 시가 공사비의 30%, 주민이 약 30%, 경남에너지가 약 40%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경남에너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행되기가 힘든데 그 대책은?

답변 경남에너지의 두 가지 어려운 점은 자체 투자사업비 확보 문제와 매설공사 시공업체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필요한 경우 경남에너지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겠음.

질문 롯데백화점 신관 개설등록과 관련해서 상남시장 상인회장님이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사건의 경위는?

답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과 시 조례에 의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전통시장과 맺은 상생발전 협약내용을 첨부해서 시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 그 과정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이 회장에게 지급되고 회장이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상인회 내부고발에 따라 공금횡령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도지사의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볼 때 도청사를 제2도청사 건립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체화 했고 이것이 결정되면 우리시의 대책은?

답변 도의 행보가 공식화되고 추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노창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및 운영협약 개정관련,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공사설립 재추진 이유 및 자본금 마련계획)

질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전임 강원규 경륜공단 이사장이 사임하고 7개월이 넘도록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2012년 12월 중순경에 임명할 예정이었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분을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0조에 의거 경남도와 협의했으나 특정인 1명을 한정하여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함에 따라 임명하지 못하고 그 간 경남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 재공모를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질문 2000년 9월 1일 총 사업비 900여억원을 들여 경남도 50%, 창원시 50% 부담하여 개장한 후 13년 동안 레저세를 통한 경남도 재정 기여금액이 3,959억원임. 설립 당시 지분 등을 감안하면 약 1,981억원이 창원시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은?

답변 2000년부터 레저세 징수액 대비 도비지원금은 총 1,483억원임. 2000년부터 총 도세징수액 3조4,022억원 중에서 53.6%인 1조8,242억원을, 2012년도에는 도세징수액 3,756억원의 78.9%인 2,962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음.

질문 2014년 세입이 1,400억이나 줄어들어 설립자본 조달이 어려워 의회와 협의하여 설립을 연기했음. 4개월이 안되어 다시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답변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택건설,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다면 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9(금)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석 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비정규직 문제(본청, 3개구청 식당조리원, 주차단속원의 차별적 처우관련)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등

질문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식당조리원의 인원과 2013년 1인당 월 임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본청 식당조리원의 2013년 1인당 월 임금은?

답변 성산, 의창 각 3명, 진해 5명으로 인원은 총 11명이며, 20일 근무 월 평균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무기계약직은 20일 기준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질문 임금 격차가 통상,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차이가 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근로자의 인건비는 노동의 강도나 업무량, 숙련도, 경력 등을 참고로 하지만 임용권자와 사업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보수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함.

질문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의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상시, 지속업무로 보이는데 올 하반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답변 상시, 지속업무로 봐서 계획서상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겠음. 2년의 시기 도래 및 직무분석을 거쳐서 2013년 올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1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정 쌍 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통합시 청사 관련(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시장님의 견해)

질문 2010년 7월 1일 3개시 통합 이후 통준위 결정사항인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답변 밝히지 않아도 시장이 노력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임기 중에 시청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11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통합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

질문 오랜 진통 끝에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역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와 특위활동까지 있었지만 통준위 결정사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음. 시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음.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함. 이번 특위 결론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했지만 그 중에 분리안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질문 청사결정은 의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110만 수부도시 창원시장으로서 이 청사 문제도 당연히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청사문제는 혹시 다음 시장님의 정치미래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가?

답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청사문제에 대해서 무수하게 입장을 밝혔음. 미래의 정치적인 입지나 미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이때까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음.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19(수)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 관련 성과와 문제점 및 우리시의 대책

질문 우리시에서 도심재생에 관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과 예산편성 경로 등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불종로 전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 RND테스트베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왔음.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국토부가 도시재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창원시가 2011년도에 창동예술촌에 시비를 투자하기 시작했음.

질문 지난 5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이 우리시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 12월 4일날 시행하게 됨. 그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토부가 만들고 있고 우리도 그 재생법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과정을 선점해서 가고 있음.

질문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한다면 좀 더 발 빠르게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내부적으로 국토부하고 먼저 이루어지고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충분히 감지해서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음.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우리시의 에너지 정책 및 북면 신도시 교통분산 정책

질문 우리시의 에너지정책,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시의 역점 시책은 무엇인가?

답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1만호 보급을 목표로 그린홈 사업과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금년 5월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양해각서 체결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특히 작년 12월준공된 진해구 명동 소재 창원솔라타워에 6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 농업정책은 우리 기업정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인데 우리 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음. 조례에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담을 계획은?

답변 농가에서 난방비가 생산원가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농업기술센터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농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질문 북면지구 개발에 따라 3~4년 후 북면지역 8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교통 분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답변 대중교통 체계를 2가지 분야에서 검토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수요에 맞추어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음. 도로확장 부분은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음.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19(수)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순 규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신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3단계 조사용역의 최종결과는 구.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신규야구장 입지로 발표된 시점인 1월 30일 두 달 뒤인 3월 29일에야 완수되었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평가기준, 최종 후보지가 선정 되고 난 후에 기본구상, 기본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후보지는 1월 25일에 선정을 받아서 1월 30일에 결정해서 발표 했음.

질문 내년 6월에 신규야구장 착공이 되면 올 12월달에 내년도 야구장 건립비용과 해군관사 건립비용만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는가?

답변 가용예산이 1조원 정도로 복지예산을 빼면 7,000~8,000억원이 됨. 이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 KBO에서도 신규야구장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본 의원도 의회를 통해서 서류제출과 서면질의도 했음. 3단계까지의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이미 의회에 보고되고 언론에 1, 2, 3차 다 공개되었음. 단지 용역결과보고서 라는 책자를 공개 안 한 것 말고는 다 공개했음. NC와 당초 협약서를 보면 서류나 과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서로 협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필요한 부분은 다 공개를 했음.

송 순 호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신규 야구장 건립 관련 및 마산시 분리 관련

질문 현재 마산구장의 좌석수나 규모로 보면 9개 구단 중에 네 번째 정도고 광주와 삼성이 새로 신축하고 나면 여섯 번째가 됨. 현재 프로야구를 진행하는데 마산 야구장이 부족함이 있는가?

답변 관중석의 상위 4개 팀이 거의 다 25,000석 이상이고 신축 중인 광주나 대구 역시 24,00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약속대로 25,000석을 가야 된다고 판단됨.

질문 2016년까지 해군관사 건립비용, 야구장 건립비용 다 포함하면 2,000억이 들어감. 2015년까지 시비로만 2,000억원을 투입해야 됨. 1년 가용재원이 2,000억원인데, 2년 동안 거기에 다 투입하면 다른 사업은?

답변 그에 대한 재원을 발굴해서 수익을 올려서 할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봄. 국비 300억 정도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비 200억원은 기 확보했음.

질문 정확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여론조사가 공정한 설문문항이 선결조건이고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마산시 분리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도 고민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변 여론조사든 시민투표든 어떤 형태로든지 마산지역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강 기 일 의원

귀농마을 조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3. 4. 15.)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대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진 수 명 의원

진해구 특수학교 설립추진 제언
(2013. 4. 15.)

진해구 특수학교 설립으로 진해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에 2~4시간을 통학버스 안에서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진해구 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람.



문 순 규 의원

창원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및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2013. 4. 15.)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추모관 및 기림비 건립 등 기념사업 적극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 조사·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최 미 니 의원

전쟁위기 고조에 따라 창원시는 만일의 사태에 조속히 대비해야 한다.(2013. 4. 15.)

특히 비상시 장애인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창원시 1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 가능한 대피소의 위치를 알려야 하며,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는 통로를 장애인시설로 정비해야 함. 또한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망 구축과 이동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박 순 애 의원

공공기관 내 장애인 카페 설치에 관하여(2013. 4. 15.)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창업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바람. 사회적 기업에 많은 관심과 청사 내 2평씩만이라도 자리를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조 준 택 의원

시립예술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2013. 4. 23.)

창원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지금까지의 고정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통합 이후 많은 단원들을 확보한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순수예술분야와 대중예술 분야로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바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통합 전·후 (구)3개시 예산과 부채, 향후 중장기 집행계획에 관하여(2013. 4. 23.)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문제로 지역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화합은 커녕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더욱더 의회나 집행부, 지역 시민들의 분열만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지역별 예산문제까지 거들먹거리며 구)마산 지역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음.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람.



송순호 의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제대로 파악해야 (2013. 5. 10.)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현황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됨. 이는 행정의 낭비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분노수집·운반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는 일임.



이상석 의원

환경단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촉구(2013. 4. 23.)

최근 몇 년간 주남저수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역 주민들은 배제한 채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힘겨루기를 함으로써, 동읍지역은 환경단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주남저수지로 인해 동읍 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환경단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김중대 의원

박완수 시장은 통합 합의정신과 지역화합에 충실히 해야 할 때이다. (2013. 5. 10.)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마산 분리에 대한 시장님 입장 표명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임. 하루 빨리 창원시민들이 화합해서 창원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특단의 노력을 촉구함.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순규 의원

창원시와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3. 5. 10.)

도시가스 공급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공공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2013년도에 특별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독주택과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정쌍학 의원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2013. 5. 10.)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함. 의장은 지금이라도 위법한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 인정하고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의 가결 무효를 선언할 것과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10만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석 규 의원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에 대해(2013. 5. 14.)

회차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16년간 소음과 공해를 인내해 왔음. 인근 성주 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회차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시의 약속 때문임. 이전에 따른 배차문제와 정시성 확보, 그에 따른 버스업계의 반발 등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함께 논의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함.



박 철 하 의원

해양오염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3. 5. 14.)

2010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고에 의하면 속천만과 행암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공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심하게 오염된 상태임. 2007년 실시설계 자료에도 진해 속천만, 행암만은 꼭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함.



차 형 보 의원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창원 식재료비
시장, 우리지역 농수축산물 전량
급식 활용정책 추진을...
(2013. 5. 14.)

창원시의 학교, 공공기관, 단체, 기업, 병원 등에 지역 농산물 우선 급식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창원시가 금년도 155억여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의 급식 전량을 '창에그린' 품목과 아울러 지역우수 농·축·수산물을 반드시 급식토록 해야만 함.



조 준 택 의원

지금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다이노스가 신규야구장
건립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
(2013. 6. 5.)

진해 육군대학부지의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왜곡된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NC다이노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꿈의 구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함.



강 기 일 의원

청정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건의
(2013. 6. 5.)

창원시의 청정해역 일원이 환경 오염이 되기 전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와 연계한 체계적인 학술적 보전가치를 지닌 청정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임.



정 광 식 의원

마산항 연안크루즈 터미널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2013. 6. 5.)

창원시 예산 12억700만원을 투입한 사업에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원 크루즈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한 개사도 응모하지 않았음.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이 시설물을 방치하지 말고 인근 마산어시장 장어거리 상인회에서 한시적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남의 의견도 존중하라
(2013. 6. 19.)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박철하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함. 자기 이익만 채워지면 남의 아픈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남의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예의 없는 망언은 삼가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정상학 의원

박완수시장은 마산분리에 적극 협조하여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데 온 몸을 던져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2013. 6. 19.)

1순위 중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시장 스스로 창원에 청사를 둔다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는 것임.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부처에 분리를 촉구하는 등 마산분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



박해영 의원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방안' 등에 대하여 (2013. 6. 28.)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의 입체화방안' 과 '창원공고 주변 정화구역 및 의창구획정리조합' 에 대하여, 도시공간활용 정책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도시공간의 생산성과 활성화에 대한 제안과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을 해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음.



강용범 의원

통합 이후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과 마산 분리의 당위성에 대하여 (2013. 6. 19.)

제1회 추경에서 마산과 진해의 공영개발로 인한 부지매각 대금은 마산, 진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편성해야 함. 통합의 목적대로, 통준위의 결정대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는 것임.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마산분리에 대하여 알기 알부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철하 의원

창원시 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2013. 6. 5.)

마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미래에 마산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시기 바람. KBO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창원시는 야구보다 국가의 발전, 도시의 발전이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전수명 의원

진해야구장 건립 포기할 수 없다.
(2013. 6. 28.)

진해야구장 건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진해야구장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해구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여건만으로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진해구를 방문해 보고 배후 인프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 조 의원

노인세대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13. 6. 28.)

마산회원구 지역의 부족한 노인들의 여가 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체육시설
설치로 각박해져가는 사회풍토를 개선하여 어른 공경의
효친사상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 영 주 의원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2013. 6. 28.)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현저하게 부족함. 이러한
현상들은 의회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정책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임.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 등의 예산이 지역 간 균형과 작은
것부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복지시책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시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 바람.



김 석 규 의원

대책없는 창원시 비정규직 대책
(2013. 6. 28.)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제안함.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형식적인 대책을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세부적인 실태
조사 및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비정규 관련
조례' 도 반드시 제정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송 순 호 의원

구)마산시 분리 추진과정에서
창원 시민의 뜻 반영해야
(2013. 6. 28.)

시장은 마산분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음. 시장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함. 이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더 정확한 시민의 뜻을 물을 용의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마산시 분리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좋은 방안임.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 녹산지구 주거단지 해제 건의안

진해구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10월 20일자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 개발 지정 고시되어, 1990년 1월 23일자로 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결정에 의거 창원시 용원지역인 1공구에 대하여 1990년 5월 4일 녹산공업단지조성공사(1공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토지공사에서 시공하여 1999년 8월 31일자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되어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진해구 용원동, 청안동, 안골동(일부)으로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에 이원화되어 있고, 주거단지 내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해 2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적용으로 행정력 낭비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 및 시행기간 지연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폭 15m이상 신설 및 현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면적 10%이상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음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시설규모, 용량 50% 미만인 경우 개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 시설규모, 용량의 누적변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설물 규모와 용량을 확인하는 등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 12월 1일자 총 52,595,000㎡에서 주거단지 일부 15,839,000㎡를 창원국가산업단지 일부해제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자

총 60,189,900㎡에서 주거단지 일부 9,928,000㎡를 해제한 여수국가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제사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용지와 주택용지 등을 개발·공급하여 왔으나 이 중 배후주거단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산업단지로 존치되어 주민불편과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개발이 완료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일원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한 예입니다.

창원시의회는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거주하는 11,591세대 30,914명의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에 이원화된 산업단지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계획인 주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등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인 녹산(주거)지역의 개발편의를 도모하고,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주택용지 등 총 10,515.8천㎡ 중 녹산지구 배후주거단지(용원지구)인 1,672천㎡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산업단지로 존치하는 것은 11,591세대 30,914명의 시민들에게만 교통을 부담하는 행위로 도시 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의 기반시설 변경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 우리 역사 교과서 명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진해창원시의회의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후 8년 동안 조례 제정 기념식은 물론 많은 자료와 문헌 등을 수집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연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대마도 영토권을 조기에 확립하기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마도 반환요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국민에게 천명하고 훗날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해져 반드시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상도(上島)와 하도(下島)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배상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해야 한다”면서 대마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던 것이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것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949년 12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대마도 반환은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영토 침탈과정을 배운 유일한 지식인이었으며, 정확한 역사 인식과 우리 영토 관련 국제선언의 바탕위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고등학교)에 의하면 대마도 관련 1419년(세종 1년) 이종무는 병선 227척, 병사 1만 7천여 명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토벌하여 왜구의 근절을 약속받고 돌아왔으며,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수많은 대마도 관련 자료들은 은폐하거나 파기해 버렸음에도 우리 주변의 고지도나 문헌과 자료들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하고 표기한 자료는 너무도 많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당당히 명기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을 핑계 삼지 말고,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다.

2013년 4월 15일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창원시 소재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



경상남도는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을 창원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지사는 선거공약에 도민과 창원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창원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도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한 것은 창원시민의 행복과 생활안정을 무시한 처사로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청이 1983년 7월 1일 부산생활을 청산하고 35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지금의 사림동에 자리한 약 67천평의 도청 부지는 30여년전 오직 농사로만 연명해 오던 원주민들이 금지옥엽 같은 농토임에도 흔쾌히 허락하여 도청이 들어서게 되었다.

도청 등 공공기관 및 국가공단조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대손손 내려온 생활터전과 문전옥답 수용을 감내해왔던 창원 원주민들의 이런 뼈아픈 역사와 아픔을 뒤로한 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공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소방훈련장 예정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창원 원주민을 비롯한 110만 창원시민을 경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창원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보류하겠다는 발표와 경상남도의 채무 정리를 위해 창원시 소재 도유재산을 이전 및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것이며, 통합 창원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소재 도 산하의 인재개발원, 보건환경 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문화 연수원, 도로교통공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소방훈련장 예정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과 도유재산 매각이 사실화 된다면 창원지역 도심 공동화는 물론 지역상권 상실로 유령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며, 이로 인한 지역감정이 심화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상생과 화해의 시대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합된 창원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동반자로서 협의하는 상생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경상남도는 창원소재 공공기관(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문화연수원, 도로교통공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소방훈련장 예정부지 등)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



이명박 정부의 작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편승하여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한지 3여 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여 있지만 길게는 수 백 년에서 짧게는 30여년 이상 독립·독창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탓에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 시 의회의 의결로 통합하였습니다.

이후 통합의 주체인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통합으로 촉발된 지역 간의 반목과 불신, 대립과 갈등을 통합 창원시의 발전 시너지로 순치(馴致)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死文化)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원상회복)키로 하였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치유할 수 없고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정부가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편적 형평성 실현이 내재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통합 이후 구. 창원지역으로의 행정적·경제적 편중이 심화되어 특히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구. 마산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명칭과 시 청사 중 하나를 통합정신인 호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구. 마산 지역으로 배려해 달라는 마산지역 주민의 간절한 호소는 통합시민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하겠으나 이마저 지역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묵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의 이번 분리결정은 감정적 선택이 아닌 순리이자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통합이 졸속이며 무계획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통합 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시 의회의 건의서(국회,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에 기 제출)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3여 년간의 통합 시정운영 결과와 지역 민심에 비추어 통합 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역내 주민의 공동 이익과 국가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합치된 의사로 건의 하오니 조속히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3일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창원시는 지난 5월 1일부로 창원경륜공단이사장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선거를 도운 박상재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이사장 재선임을 둘러싸고 추천후보 결정에 많은 잡음과 비전문가 추천, 정치적 특혜 논란 인사 등으로 7개월간 장기간 이사장 선임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특혜, 보은, 부당한 인사로 간주하여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선임은 지난 1월 공모에서 창원시에서 추천한 인사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로 선임이 무산되었고, 이후 재선임 절차를 통하여 복수로 추천받은 이사장 후보에 지난 1월 공모에 탈락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추천, 경상남도 동의를 거쳐 창원시에서 임명하였다.

전문능력도 없는 인물을 재추천해 끝까지 이사장에 임명시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특혜이며 독선인사로서 경륜공단 발전에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원시의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신임 이사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길이 창원시민과 경륜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경륜공단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창원시의회는 권한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 경상남도지사는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와 시가 체결한 운영규약을 준수하고 도세인 레저세 중 징수교부금 3%를 제외한 47%를 창원시에 지원하고 관련운영 규약 개정안에 동의하라.
3. 창원시는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공단 경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 경영인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2013년 5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야스쿠니신사는 평화를 의미하는 흰 비둘기 상징과는 반대로 세계대전 당시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과 전몰자 위패 안치와 유물을 전시하여 전쟁박물관인지 신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중성을 지닌 곳이다.

일본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참배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은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고,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침략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 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 없이 일본 일부 각료 등의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규탄하며,

동북아 평화와 공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창원시의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가 과거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창원시의회는 일본 정부와 책임 있는 인사들은 더 이상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제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창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재계 13위 그룹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창원시 본사를 둔 소재 (주)STX, 조선, 엔진, 중공업 등 STX그룹 4개사가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2,500여개 업체 11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한 40여만 명이 거리에 내몰리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고용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2009년 유럽발 위기로 시작된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과 그룹오너의 무리한 기업인수합병(M&A), 해양프랜트 사업 등 조선 대체사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STX 그룹은 STX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한 그룹 구조상 조선업 계열사들의 위기가 엔진과 중공업 등 다른 우량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업체는 흑자를 내는데도 운영자금이 막혀 조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STX그룹의 위기는 적시에 지급되지 않는 금융지원이 핵심인 만큼 많은 직원과 협력사의 일자리 보장과 우리시뿐만 아니라 나라경제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와 채권단은 STX그룹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STX조선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STX엔진·중공업에 대하여 매출채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 정부는 STX 그룹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3. 방위산업이 25% 포함되어 있는 STX엔진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이며 남북대치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국방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신용장(L/C)을 오픈하라.
4. 정부와 채권단은 현행 지원하는 조선 건조비용 40% 지원을 프랑스 등 유럽과 중국수준인 80% 이상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선박수주에 따른 보증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라.

2013년 5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최근 지난 정부가 대기업의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 지원자금 87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채소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돈만 되면 동네 구멍가게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동부팜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고,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중지하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구한다.
3.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 자급에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와 관련한 의제 채택에 우선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6월 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통합 창원시는 110만 시민,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 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뒷받침해줄 지역은행의 존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970년 5월에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민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되어 총 3,528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 3월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2012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94.5%인 3,333억 원을 상환하여 195억 원만 남겨놓고 있으며,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2012년 기준 43년 만에 총자산 32조 3,000억 원, 당기순이익 1,784억 원을 남겨 경남지역의 유일한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정부에서 2013년 6월말까지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경남은행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시,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합니다.

경남은행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역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다른 지방은행·외국 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 소외 심화,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충청·강원지역의 사례와 같이 점차 퇴행되고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진원(震源)이 될 수 있으므로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남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약속한 현 정부는 경남은행이 경남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제1금융기관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는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창조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타 지방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경제가 타 지역에 완전 예속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의 금융 자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도화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가시적인 공적자금의 많은 회수보다는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6월말에 발표될 우리금융지주 회사의 민영화 로드맵에도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영되어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경남은행이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위·원·회·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서)는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가결 ▷새 야구장 건립 사업단 신설에 따라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경륜공단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위·원·회·활·동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는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는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등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제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과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변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10 ~ 6.18까지 9일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일본 구마모토현 다마나시의회 의원 방문



4월 12일 일본 구마모토현 다마나시의회 의원이 우리시 자매 교류학교 방문을 겸해 의회를 방문하여 배종천 의장을 접견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5월 10일 배종천 의장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헌일 의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차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6월 5일부터 열리게 되는 제1차정례회를 대비하여 통영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반송동 통장협의회 회원 방문



5월 27일 성산구 반송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정숙) 회원 50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과의 간담회 및 시설을 견학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대표단 방문



5월 3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대표단(단장 고걸 부주임)이 의회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우호와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공동체 정토회 법륜스님 방문



5월 31일 법륜스님이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게 될 「2013 희망 세상 만들기」 전국강연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를 방문해 담소를 나눴다.

본회의장에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6월 5일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창원 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지사 간담회



6월 20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 의장)는 경남 은행 지역 환원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제29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근)가 구성되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을 위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남은행 지역 환원 촉구」 기자회견



6월 20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 의장)는 경남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따른 경남은행 지역 환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 운영 카페 '민들레 울 2호점' 진해구청 내 개소



6월 20일 개소한 장애인 운영 카페는 의원연구단체인 복지정책개선연구회의 연구과제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맥락이 같은 사업중 하나다.

복지정책개선연구회 선진지 견학 실시



4월11일 의원연구단체인 복지정책개선연구회(대표의원 심경희)는 공공기관 내 '카페' 설치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견학을 실시했다.

2013 군악의장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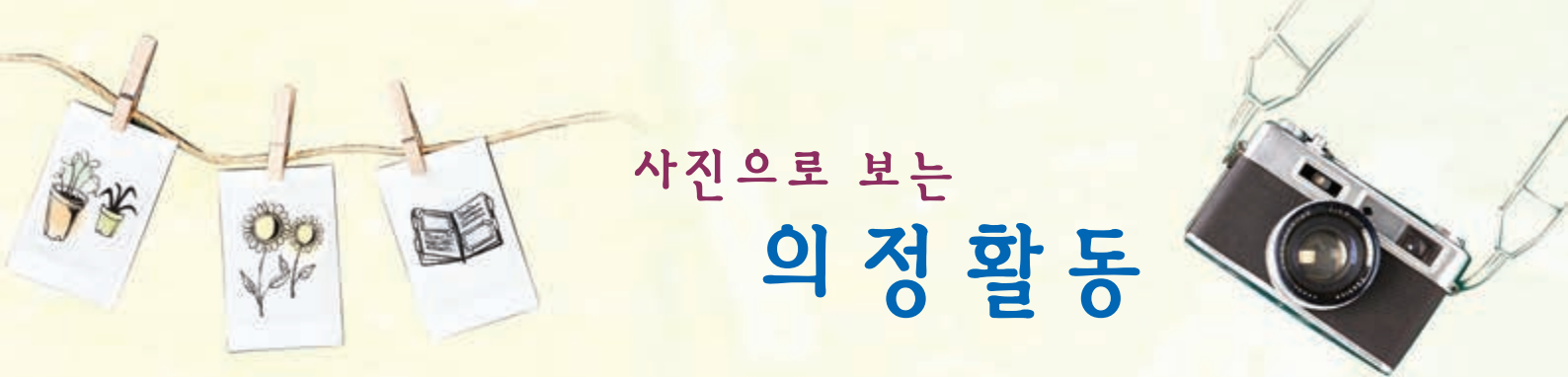


4월 8일 제51회 진해군항제 기간 중 특별한 볼거리인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개장



4월 14일 북면 천주산 달천계곡에서 창원시 최초 도심속 자연친화형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개장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제36회 마산가고파 큰잔치



마산항 개항 114주년 기념 제36회 마산가고파 큰잔치가 5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개최됐다.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가동



5월 9일 마산합포구 마산소방서에서 창원지역 2,266대의 CCTV를 한꺼번에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제21회 창원수박축제



제21회 수박축제가 5월 11일부터 2일간 창원대산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진해 충혼탑에서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지시책개선연구회(대표의원 심경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올 한해동안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복지시책개선연구회는 먼저 공공기관 내 ‘카페’ 설치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2일간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과 대전광역시청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원시에 설치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경희 대표의원은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병원 등 일정한 공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도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대전광역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청, 평생교육 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내에 11호점의 ‘건강카페’를 개설하여 총 40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광주에도 시청, 구청, 도시개발공사 등에 ‘카페’가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한편, 복지시책개선연구회는 심경희, 김윤희, 박삼동, 박순애, 이명근, 이형조, 조갑련, 홍성실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작년에는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복지시책 개선점 연구’라는 주제로 창원시의 건강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지원정책에 대해 경남대학교와의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간담회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친 바 있고, 조만간 관련 조례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진해구 가주마을 진입로 개설관련 민원현장방문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 소속 의원 11명은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7일 진해구 가주마을 진입로 개설 관련 민원발생 현장을 방문했다.

진해구 가주마을은 부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진해방향에서 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2호선을 이용, 부산 강서구까지 들어가서 U턴하여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가주마을 주민들(254세대 519명)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진입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시에 부산광역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건설도로과 관계자로부터 현실태를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도로개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6월 5일부터 열리게 되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5월 22일 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통영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최봉기 계명대 교수의 '최근 지방 정부의 변화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라는 주제로 의정실무 특강이 △ 김능구 정치·선거컨설팅 그룹 e-원컴 대표의 '정국현안 분석과 2014 지방선거 컨설팅' △ 김재화 유머 스피치연구원장의 '정치인의

유머 리더십과 소통전략' 이라는 주제로 한 교양 특강이 있으며 △ 관광수의 극대화를 위한 자치단체운용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탐승 △ 지역문화 탐방 행사로 한산섬 및 미륵도 지역시찰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배종천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찬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 그 에너지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같이 하는 창원시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 을 당부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STX 경영정상화 지원촉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 창원시의회의장)는 지난 5월 20일 시·군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마늘나라에서 제164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해 계열·협력사 2천500여개 업체 11만 여명의 직원과 가족 등 40만 여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장협의회는 "STX그룹의 위기는 적시에 지급되지 않는 금융지원이 핵심인 만큼 많은 직원과 협력사의 일자리보장과 창원시뿐만 아니라 나라경제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채권단은 STX 그룹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STX조선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STX엔진, 중공업에 대해 매출채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STX그룹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대규모 정리하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지원 하는 조선 건조비용 40% 지원을 프랑스 등 유럽과 중국 수준인 80% 이상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선박수주에 따른 보증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본 건의문은 배종천 회장이 발의하면서 "관내 주요 기업체인 STX그룹의 전체 사황이 달린만큼 지역내 관심과 함께 회생을 위해 도내 전시·군이 뜻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말로써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됐다.

배종천 창원시의의회 의장 ‘사랑의 도시락’ 배달



창원시의의회 배종천 의장은 6월 4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배종천 의장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말벗도 되어 드렸다.

배종천 의장은 “도시락 배달봉사는 먹거리가 풍요로운 요즘시대에

자칫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결식을 하게 되는 노인들께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함과 더불어 하루의 문안을 여쭙며 관심을 가져주는 훌륭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훈훈한 이웃사랑이 온누리에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결식노인 방지를 위해 무의탁,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들께 식사를 배달하는 도시락 배달 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복지시설을 통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렵게 홀로 사시는 노인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창원시의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무료급식소 현장 방문



창원시의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7일 관내 무료급식소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하절기 대비 및 시설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성산구 안민동의 안민경로당을 포함한 관내 4곳의 무료급식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원들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내실 있는 급식지원 방안을 모색코자 실시하게 됐다.

한편, 정영주 위원장은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해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 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다. 개회식에 앞서 창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6월 7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3건 △6월 28일 14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배종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보훈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보훈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창원시가 나가야할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멋진 창원시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 하자.”고 덧붙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원회 대표단 창원시의의회 방문



창원시의의회(의장 배종천)와 우호 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단장 고결 부주임) 일행이 5월 31일 창원시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우호와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단장인 고결 부주임을 비롯하여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창원시에는 지난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간 머물렀다.

창원시의의회를 방문한 대표단 일행은 방문 첫째 날 배종천 의장 등 의

회 의장단과 환영행사를 갖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아래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배종천 의장은 인사말에서 “양 기관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방문단은 둘째 날인 6월 1일에는 창원해양공원과 내수면환경생태공원을 방문하여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둘러보고 창원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창원시의의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주임 차광철)는 지난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각적인 분야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29회 창원시의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창원시의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9회 창원시의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명근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순애 의원을 선임했으며, 차형보·김이수·김성준·조

재영·김윤희·박삼동·이해련·이치우·이옥선 의원이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남은행은 반드시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 창원시의회의회장)는 6월 20일 경남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따른 경남은행 지역 환원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남은행은 경남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일한 경남 지역의 제1금융기관으로 1970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1도 1행 주의』에 따라 지역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향토 은행으로 반드시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은행은 IMF위기 이후 총 3,528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나, 끊임없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성공했고, 2012년 6월말 현재 94.5% (회수액 3,333억 원)의 높은 공적자금 회수율을 보였으며, 경남도민의 도민주 갖기 운동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 과거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초우량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경남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에 대해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끝으로, 의장협의회는 조속히 경남은행이 다시 지역민의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6월말에 발표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로드맵에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경남은행이 지역민의 품으로 환원될 때까지 지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따른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결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근 의원)는 6월 27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창원시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시 예산은 예산 2조 8,183억원, 세입 2조 8,129억원, 세출 2조 3,532억원, 사업예산 이월액은 2,83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앞으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비비 및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예산 편성시 계상한 세입예산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1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반송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의회 열다



지난 5월 28일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 본회의장에서 반송초등학교(교장 강재인) 학생들의 지방의회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반송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의회'가 열렸다.

반송초등학생 56명과 교장·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송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의회는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안'이라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배종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

려하는 모습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라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재인 교장도 "학생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창원시의회에서는 연중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진행 동영상을 상영하고,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모의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회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6월 5일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창원시립예술단(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와 협력을 다지기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품위와 격조가 있으면서도 친숙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곡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공연은 시립교향악단의 김인호 부지휘자의 지휘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엘가의 〈사랑의 인사〉 연주 △윤용하 작곡의 〈보리밭〉을 바리톤 신화수 노래 △이탈리아 작곡가 몬티의 대표곡인 〈차르다시〉 연주 △따뜻하고 순수한 느낌의 왈츠곡인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재즈모음집 No.2)〉 연주 △시립합창단 중창팀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조용필 작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로 근엄과 엄숙의 상징인 의회 본회의장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어 배종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창원시의회가 통합이후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세 번째 공연이다.



강 기 일 의원

갈등과 분쟁

(2013. 4. 10. 창원시보 제67호 게재)

현대는 정보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사회단체 등이 그 영향권 하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어 분쟁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생존본능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특정지역에 시설이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갈등, 사회적 약자와 기득권자와의 갈등 등이 있고, 국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종교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시위나 폭력으로 나타나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각종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이후의 사후해결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표출의 원인으로 상존하기도 한다.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양당사자를 이해시키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는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원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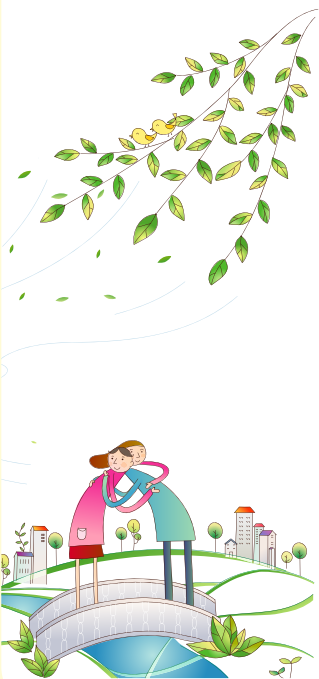
첨예한 이해관계에 직면한 당사자를 서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시킬 수 있다면 갈등의 수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조정 결과에 대해 납득과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창원시도 통합이 되면서 시민 및 사회단체 등이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면 언젠가 분쟁으로 나타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창원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조정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산·학·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운영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조정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분과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및 산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송 순 호 의원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이제 지역의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2013. 4. 25. 창원시보 제68호 게재)

내서IC는 서마산IC 인근의 교통지·정체 해소와 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2004년 8월에 내서IC를 개통하였다.

문제는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내서주민들은 서마산IC와 동마산IC처럼 내서IC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개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에 분노한 내서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였고,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2004년 부터 2010년 까지 6년 동안 옛 마산시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였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도 필자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필자는 창원시 도로담당 국장에게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창원시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리권 이양이 결정되면 창원시는 관리권을 이양 받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창원시 부시장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관계자 면담을 하였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동마산IC처럼 요금시설 미설치 구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서IC~동마산IC 구간을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이 두기관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유료도로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답변은 거짓이다. 동마산IC~서마산IC처럼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17곳이나 있으며, 관리권 이관의 사례도 4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내서IC 통행료 수입금은 년 평균 27억 원에 달하며 9년 정도 통행료를 징수 했으니 사업비 161억 원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통행료 27억 원 중 내서주민이 년 간 22억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창원시 관내의 세 개의 IC(동마산, 서마산, 내서) 중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내서주민으로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다.

내서IC에서 통행료 징수로 이제 충분히 사업비를 충당하여 통행료 무료화의 명분이 더 생겼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부당한 문제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홍준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한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창원시 그리고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은다면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다. 전국의 17곳 통행료 무료화 사례와 4곳의 관리권 이관 사례를 보더라도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역시 가능한 일이다.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여 월 태 의원

시민 정서통합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2013. 5. 10. 창원시보 제69호 게재)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올해로 22년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햇수를 보면 성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들 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①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②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 재정 등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정책 ③지방이 중앙 정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통합창원시의회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통합이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당시를 돌이켜보면 3개시 통합에 대한 최종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해놓고 통합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창원·마산·진해는 각각 성장, 발전해온 역사가 다르며 시민 정서 또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통합창원시의 혼란과 갈등은 3개시 통합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통합한 당연한 결과인 지도 모릅니다.

2010년 7월1일 통합창원시가 탄생할 때 창원·마산·진해 지역 시민들은 통합창원시가 더 큰 창원시로 화합,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창원시 현안인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의회에서 옛 창원·마산·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3명씩을 선출해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토록 하여 이 위원회에서 합의된 ①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②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현재 임시청사로 한다는 사항들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과 시켰습니다. (2013.4.23) 이로써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문제는 일단락되고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창원·마산·진해 지역은 소지역 이기주의나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통합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창원시의 백년대계와 시민의 화합,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3개 지역 시민들의 정서 통합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의 전통민속축제인 안민고개만날제, 마산 만날제, 남산 상봉제 행사들이 시민화합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공 창 섭 의원

진정한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2013. 5. 25. 창원시보 제70호 게재)

‘창원의 1번지, 경남의 1번지 지역 구 의원입니다.’ 라고 간혹 소개를 하곤 했었다. 용지동엔 시청이 있고 봉림동엔 도청이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통합된 지 3년이 되도록 시청사 문제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거기다 얹친 데 얹친 격으로 도청과도 공공기관까지 옮기려고 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할 서부권 개발본부가 발족되면서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되고, 서부권 개발 본부는 2013년 8월까지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지사 보궐 선거 때 내걸었던 도청 마산 이전에 대해서 지난 4월 본회의장에서 창원시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고 나면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그리고 도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서부권 개발본부가 출범하기 전엔 창원 관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서부권 개발본부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 뎨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 이미 대상기관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 놓고 창원시민들에게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서부권 개발본부가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되었지만 하향평준화를 통해 경남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남도의 채무를 청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창원시는 30년 전 도청과 각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창원시민들의 피와 눈물의 결실이다.

60을 가진 창원시와 40을 가진 타 도시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50으로 억지로 짜 맞추면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경남도내에 있는 것을 자리 이동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경남이 아닌 다른 도와 시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 생각한다.

옛 창원시 원주민들의 뼈아픈 역사와 아픔을 뒤로한 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중앙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여 도지사의 능력을 발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 상 인 의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2013. 6. 25. 창원시보 제72호 게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짙어지는 녹음을 바라보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되새기게 됩니다.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호국영령들과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는 충훈탑을 찾아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보훈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국군장병들을 위문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웠던 지난 시절, 호국영령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고, 목숨과 바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호국영령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기리는 일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리나라와 생활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애국심과 국가발전은 우리 곁에서 멀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대국을 이루었던 모든 국가들은 언제나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들을 얼마나 정성껏 예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화 물결 속에 민주화를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훈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이 최근 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를 상향 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애국심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 계승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